

Politics And Law

2025.06.04.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프적이는 재수생 지음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필수 교양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6월 4일에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영역은 상당히 무난한 난이도로 치뤄졌다. 최고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는 18번 문제로, EBSi 기준 63.8%의 오답률을 기록했으며. 해당 문제는 5단원 사회 생활과 법 단원의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파트였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최고 오답률 78.1%(EBSi 기준)을 기록한 14번 문제였으며, 이는 4단원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부부간의 법률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 파트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낸 문제였다. 14번과 15번은 동일한 제시문을 공유하는 문제였으며, 15번은 14번에 이어 50.1%의 오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각 개념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통적인 킬러문제였던 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의 선거구 문제는 9번 문제로 나왔으며 오답률은 36.3%에 그쳤다. 이는 선거구 파트 문제가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계산문제에서 세부적인 개념을 요하는 문제로 바뀌는 트렌드에 발맞춰 잘 따라간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오답률 TOP3 안에 드는 문제들이 세부적인 개념을 묻는 선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예를 든다면,

ex) 25_06_15 3번 선지 값이 ○○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록 해당 선지가 정답과 직결되는 선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오답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들 또한 개념을 묻는 선지였다는 점에서 평가원은 이제 시간의 촉박함을 이용해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주지 않고 더 세부적인 개념을 통해 혼동을 주어 변별력을 주려고 할 것임을 해당 시험에서 표출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선 개념 자체를 설명한 뒤 옳은 설명을 판단하는 방식의 문제로 출제된 만큼 민법과 형법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개념을 보충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악회에서 회비 인상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을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교사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 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학급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회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출제 분석

정법의 단골 1번 문제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의 고유한 활동]** 과 **[모든 사회 집단]** 이 주요 키워드로 쓰였다.

1번 문제의 주요한 특징은 대개 두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공통점이 정답 선지로 쓰이며, 3~5번 선지에 있는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해당되지 않았다.

1번. 갑의 관점은 학급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회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이다. 좁은 의미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뿐더러, 학급의 의사 결정 활동을 정치라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2번. 을의 관점은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 넓은 의미의 관점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판단하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 또한 정치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3번.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 허나 모든 관점은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틀린 선지이다.

4번.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 정치의 주체가 비교적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 즉 을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5번.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이다. 따라서 5번 선지는 갑에게만 해당된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무래도 틀렸을 리는 없겠지만...

좁은 의미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의 특징에 대해 한번 더 공부하길 바란다.

거기에 더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길 권장한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와 B 모두 [가]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일반적 요청을 충족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는 점에서 B와 구별된다. 극도로 부정직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B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만, A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청한다.

<보 기>

- ㄱ. A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 ㄴ.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ㄷ. (가)에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ㄱ. A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A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청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B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고, (가)는 A와 B의 공통점,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이므로, ㄱ은 옳다.

ㄴ.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앞서 판단한 대로 B는 형식적 법치주의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하므로 ㄴ은 옳다.

ㄷ. (가)에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 들어가야 할 것은 법치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특징이 된다.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ㄷ은 옳다.

ㄹ. (나)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나)에 들어가야 할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전체를 포괄하는 특징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ㄹ은 옳지 않다.

출제 분석

법치주의의 유형을 물어보는 전통적인 문제 유형이다.

지문에선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만]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런 문제의 특징으로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나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와 같은 법치주의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자주 쓰인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무래도 틀렸을 리는 없겠지만... 물론 1번을 틀린 것보다는 낫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하고, [법치주의] 라는 키워드가 갖는 특징에 대해 공부를 하는것이 좋겠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의 기관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임기 동안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의 기관은 표출된 국민의 의사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A를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출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판단하는 문제다.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라는 키워드가 쓰였다.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연결할 수 있다.

- ①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이다.
-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가가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1번.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다. 따라서 정답 선지다.

2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따라서 오답 선지다.

3번.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이다.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따라서 오답 선지다.

4번.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다. 따라서 오답 선지다.

5번. 국가가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가가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 원리이다. 따라서 오답 선지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판단에서부터의 애로사항이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의 문제는 쉽게 나오면 각 원리 고유한 특징에 대해 묻고,

어렵게 나오면 공통적인 실현 방안을 통해서 혼동이 오도록 꼬아서 내곤 한다.

맞았던 틀렸던, 각 원리 특유의 특징 및 공통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한번 더 정리하는것을 추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특유의 원리인 평화 통일 지향과 국제 평화주의를 섞어서 낼 때도 있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長)과 D의 장(長)을 임명한다.
-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D의 구성에는 C의 장(長), A, B가 모두 관여하며, C의 장(長)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E는 조직상 A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헌법 기관으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고, E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 ① B는 A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②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③ C와 달리 D는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④ D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 ⑤ E는 B에 대한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1번. B는 A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B는 국회, A는 대통령이다. 국회는 비준권이 아닌 대통령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2번.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C는 대법원, A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하며, 단심제로 진행한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국회 의원 선거 소송, 광역 단체장 선거 소송, 교육감 선거 소송, 비례 대표 광역 의회 선거 소송 등이 있다.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소송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은 2심제이다.)

3번. C와 달리 D는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가진다.

C는 대법원, D는 헌법 재판소다.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대법원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가지고 있다.)

4번. D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D는 헌법 재판소, A는 대통령이다. 헌법 재판소가 가지는 것은 탄핵 심판권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권리이다.

5번. E는 B에 대한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E는 감사원, B는 국회다. 국정 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감사원이 지닌 권리는 행정 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권이다. (국회, 법원 및 헌법 재판소는 제외)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본격적으로 진짜 지엽개념이 등장하는 파트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직 정법이 어떻게 개념을 꼬아서 내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2단원 민주 국가와 정부 이후 단원의 기출들을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국회는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를 한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안을 조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국정 조사의 시작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며 국정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 위원회이고, 국정 조사의 주체는 특별 위원회와 상임 위원회라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점점 지엽적으로 나오는 추세임으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엽적 개념도 숙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며, 자주 묻는 단골 키워드도 익혀놓으면 좋다. 이 문제에서는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을 담당] 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동의를 얻어] 키워드가 쓰였다.

따라서 A,B,C,D,E는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감사원이 되겠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5.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A는 지방 자치법에서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B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인사 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 권한을 가진 A의 요청 없이는 B가 인사 청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기관인 A에 대한 B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①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1번.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비례 대표 의원 뿐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2번.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B는 지방 의회,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 옳은 선지이다.

3번.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4번.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B는 지방 의회,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의회 뿐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5번.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차원의 권력 분립이다. 수평적 권력 분립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도 규칙과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혹은 주민 소환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그 외의 선지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다른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해 나왔다면 더욱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주민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주민 감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한다. **(비교과)**

주민 소송 제도는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청구 주체와 청구 대상에 대해 나올 가능성도

적지만 열어두는것이 좋겠다. 특히 지방 선거와 관련되어 다른 단원과 엮일 경우,

광역 단체장 선거 소송, 교육감 선거 소송, 비례 대표 광역 의회 선거 소송은 단심제,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소송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은

2심제임을 기억해 두자.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주민 감사에 대해 불복할 시에 재정에 관련된 경우에만 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제 분석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다.

비슷한 유형으로 여러번 출제되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생소한 선지들이 자주 보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선 **집행 기관**이라는 강력한

힌트를 주어 난이도를 낮추었다.

따라서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이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6.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공허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A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한 A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넘어 비경제적인 영역에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②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출제 분석

기본권의 유형에 대해 묻는 문제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여 그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A가 사회권임을 알 수 있었다.

1번.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틀린 선지다.

2번.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틀린 선지다.

3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해당한다.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이므로 틀린 선지다.

4번.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옳은 선지가 되겠다.

5번.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행복 추구권에 가깝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는 없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무래도 특정 기본권 고유의 특징에 대한 공부 that 필요해 보인다,

각각의 기본권이 갖는 특징과 등장 배경, 성격까지 보충해서 공부를 하는게 좋겠다.

특히 사회권은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권리]이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은 각각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특징이 있어 묶어서 나오기 좋으니 이것 또한 숙지하자.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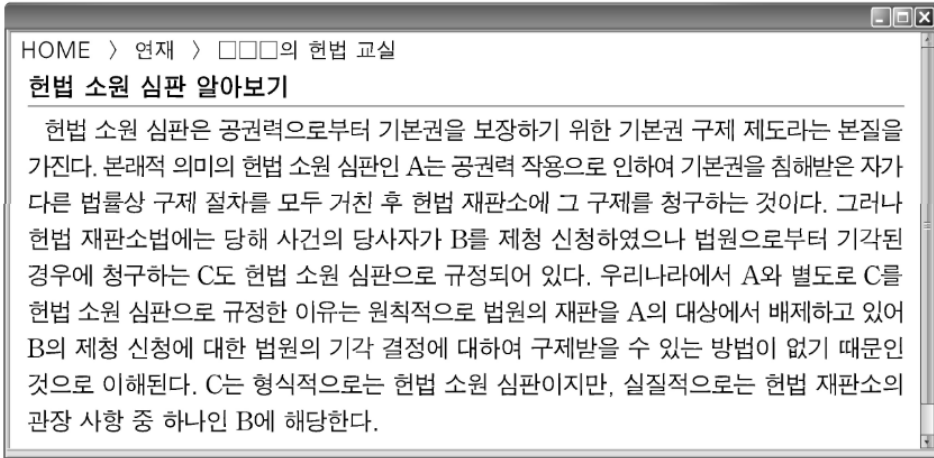
출제 분석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사례 중심의 제시문이 아닌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제시문이 나온 독특한 문제였다.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 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 라는 부분에서 A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임을, [B를 제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C] 라는 부분에서 B가 위헌 법률 심판, C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 공권력 [작용] 으로 인하여.... 라고 제시문에 나와있는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시에만 가능하므로 [공권력 작용]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를 모두 포함한다고 평가원이 제시를 해준 것이다.



<보 기>

- ㄱ.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ㄷ.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ㄱ.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B는 위헌 법률 심판, C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므로 ㄱ은 옳다.

ㄴ.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B는 위헌 법률 심판, C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요구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ㄷ.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C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념의 정의에 대해 제시문이 나왔다고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 위주의 제시문에 대한 공부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ㄷ 선지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작용]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세하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나와있던 말이지만, 만약 9월 모의평가 혹은 수능에서 제시문을 사례 위주로 낸 뒤에 해당 선지를 냈다면 오답률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다. [작용]에 대해서는 출제 분석란에 자세하게 써두었으니 살펴보길 바란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신문 ○○○○년 ○○월 ○○일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갑은 지난 총선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달 □□법 개정안을 갑이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B는 □□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A에게 빠른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익적 사회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 ① A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③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 ⑤ B와 달리 C는 A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출제 분석

정치 참여 집단과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문제다.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파트도 지엽적으로 낸다면 낼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는 쉬웠으나 매번 이렇게 나올거라고 확신은 할 수 없다. 유의하길 바란다.

[공천]에서 A가 정당임을, [특수 이익]에서 B가 이익 집단임을, [공익 추구]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에서 C가 시민 단체임을 알 수 있다.

1번. A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는 정당이다.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틀린 선지다.

2번.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B는 이익 집단이다.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없다.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 기구 또한 없다. 또한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투입을 담당한다. 틀린 선지다.

3번.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C는 시민 단체이다.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틀린 선지다.

4번. B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B는 이익 집단, A는 정당이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은 오직 정당이다. 옳은 선지다.

5번. B와 달리 C는 A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 A는 정당이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당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쉽게 나왔으나 수능까지 이 파트가 쉽게 나올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일단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출과 투입, 환류에 대해 공부를 더 하는게 좋겠다.

지엽적으로 나온다면 정당이 정부의 제소를 거쳐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는 점.

모든 정치 참여 주체가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모든 정치 참여 집단이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정치적 책임은 오직 정당만이 진다는 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t시기와 t+1시기에 동일하지만, 을국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음은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내용이다.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출제 분석

아... 잠시만, 이게 왜 여기있을까, 그렇다, 올해 첫 평가원 모의고사의 선거구 문제는 9번에 등장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똑같이 개념 위주의 선거구 문제였다.

자 그럼 제시문을 분석 한 뒤에

선지를 보러 가자.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아, 이 문제는 선거구 파트와 정부 형태 파트를 섞어서 낸 문제였다. 이렇게 정치와 법은 단원과 의 유기성이 높기 때문에 섞어서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구멍이 있어선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제시문 분석

자, t시기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자,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은 t+1시기에 정부 형태를 변경했다고 한다. 갑국의 t시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B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이 아니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의 t시기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된다. 그럼 자동으로 t+1시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되게 된다.

그러나 t+1시기 을국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제시문에 따라 계산을 해주면,

을국의 비례대표 의원은 a당, b당, c당 순서대로 49명, 34명, 17명이 된다.

그러므로 총 의원 수는 a당 101명 b당 71명, c당 28명이 된다.

이제 소 선거구인지, 중 선거구인지, 대 선거구인지를 확인해 보자.

제시문에 따르면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므로, t시기에는 두 나라 다 소 선거구제이다.

그러나 을국은 t+1시기에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50개로 축소했으므로 t+1시기 을국의 선거구 제도는 중 선거구 + 비례대표제이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9.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③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④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 ⑤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ㄴ.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ㄷ.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ㄹ.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번.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갑국은 두 시기 모두 대통령제이므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틀린 선지이다.

2번.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을국은 t시기에는 대통령제, t+1시기에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틀린 선지이다.

3번.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t시기에는 두 나라 모두 대통령제이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없다. 틀린 선지이다.

4번.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t+1시기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이므로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 틀린 선지이다.

5번.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t+1시기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옳은 선지이다.

ㄱ.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갑국은 소 선거구제로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 선거구제이다. 옳지 않다.

ㄴ.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옳은 선지이다.

ㄷ.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은 비례대표제이다. t+1시기 을국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옳은 선지이다.

ㄹ.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t+1시기 을국은 중 선거구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할 수 있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50%만 차지 가능하다. 그러나 a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51석으로 지역구 의석률이 51%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출제 분석

9번은 평범하게 정부 형태 문제이고

10번은 선거구 문제다.

그렇지만 10번에서의 특이한 선지가 보인다.

[ㄹ.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을 했는지, 혹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했는지는 선거구의 크기와 과반수 의석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 선거구 제도에서는 두명 이상을 공천을 하던 안하던 한명만 선출이 가능하므로,

최대 100%의 의석률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선거구 제도부터는 한명씩만 공천을 할 시에,

한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의 의원이 두명 이상 선출 될 수 없으므로 최대 50%의 의석률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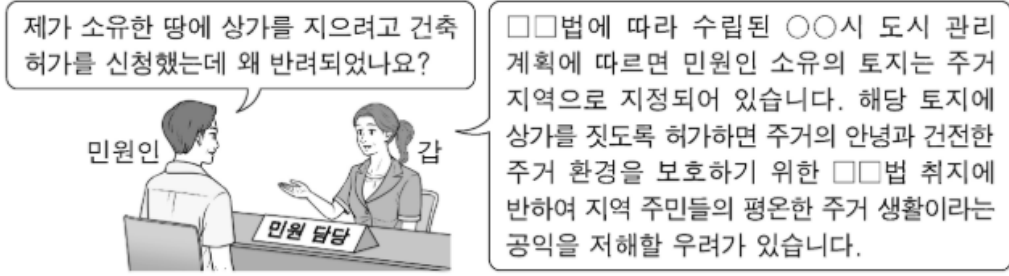
즉, 과반수 의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례대표제가 존재하지 않을때만 가능하다.

비례대표제가 있다면 지역구 의석률이 50%여도 비례대표 의석률이 100%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이러한 사실을 노리고 이 선지를 낸 거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1. 갑의 답변에서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 ③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④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되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출제 분석

무난무난한 민법의 기초 문제이다.

근대 민법의 세가지 기본 원칙과

수정 및 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묻고있다.

간단하게 각 선지를 보고 여섯 가지의 원칙중 하나로 특징지어 처리하면 된다.

이 부분은 지엽적으로 나와도 관련 조항을 묻는 선에서 그칠텐데, 그리 어렵진 않게 나올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란 소리는 아니다.

[공익을 저해할 우려]를 통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1번.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틀린 선지다.

2번.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틀린 선지다.

3번.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옳은 선지다.

4번.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틀린 선지다.

5번.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되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내는 설명이다.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각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 한 뒤에 설명과 원칙을 잇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수정 및 보완된 것이지 대체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부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B에게 A(14세)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놀러 갔다. A가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자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A를 치어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도자기도 파손되었다.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 다치게 하였다.

- ① A가 어항을 깨뜨린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E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출제 분석

제시문 독해를 요하는 불법행위 파트이다..

원래는 구조도를 그려가며 푸는게 편했으나 요즘엔 구조도를 그려도 구조도가 복잡하게 나올 때가 많아져 빠르게 선지가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푸는것을 요하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바로 선지 판단으로 넘어가 보자.

1번. A가 어항을 깨뜨린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틀린 선지다.

2번.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된다.

3번.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B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 다치게 하였으므로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옳은 선지다.

4번.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사용자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틀린 선지가 되겠다.

5번. E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것은 계약 당사자인 골동품 판매업자 D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제시문 독해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혼동했을 수도 있다.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채무 불이행 책임을 피용자가 진다고 내는 것과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평가원의 단골 함정이므로 유의하자.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출제 분석

제시문 독해를 요하는22

또 하나의 법 파트 단골 문제이다.

외워 놓으면 쉽지만 그 외워 놓는게 어렵다.

형사절차 파트는 나이에 대한 차이점,

보호 처분과 보안 처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차이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만큼 복잡해지는 것이 없다.

복잡해져서 피보기 전에 외워두자.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다.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신 상실자로 책임 조각 사유다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 갔다가 잃어버리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찾아오라고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병,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을과 정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검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 ①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 ②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⑤ 검사는 정은 절도 행위가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번.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일단 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었다. 그러나 병은 13세인 촉법 소년이다.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틀린 선지가 된다.

2번.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을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틀린 선지다.

3번.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확정 판결 전까지 적용된다. 틀린 선지다.

4번.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기소유예는 [유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다. 틀린 선지다.

5번. 검사는 정은 절도 행위가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은 위법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다. 정은 심신 상실자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책임이 조각되었다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순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은 선지가 되겠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마찬가지로 제시문 독해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죄 소년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파트는 지엽적으로 나오면 그 어떤 단원보다 어려워 질 수 있는 파트이다. 틀렸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고 소년 사건의 대상에 대해서, 또 형의 선고와 형법상 보안처분까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 2학년인 갑(17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 후 을과 적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 벌고 있던 갑은 귀가 중 정씨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게시된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려고 정에게 ○○화장품을 광고의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은 5만 원인 □□화장품도 함께 구매해야만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건네자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 ①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이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 ④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출제 분석

제시문 독해를 요하는 333

또 하나의 법 파트 단골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형사 절차보단 외우는데 쉽다.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전부 법정 대리인 병의 허락이 필요없다는 점을 챙기고 선지를 보러 가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는 제시문 독해에 어려움을 겪었다기 보다는

청약과 승낙이 애매하다고 느껴져서 3번을 찍고 넘어가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 기억하자.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가 청약이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가 승낙이다.

갑이 구매하겠다는(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승낙한 것은 갑이다.

이 부분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마지막 계약 파트인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과 철회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과 무효의 경우와 취소의 경우를 확실하게 암기하자.

1번.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근로 계약은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이다. 틀린 선지다.

2번.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틀린 선지다.

3번.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이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앞서 설명했다 싶이, 정이 청약과 갑의 승낙으로 성립했다. 틀린 선지다.

4번.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병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허락하였기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한다. 틀린 선지다.

5번.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4번 선지의 설명과 같다.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옳은 선지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 후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 고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①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와 □□ 고등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출제 분석

제시문 독해를 요하는 4444

또 하나의 법 파트 단골 문제이다.

이번 수능에 지엽적으로 출제되어 또 하나의 복병이 될거라고 예상하는 파트중 하나이다.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노동법 문제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닌 부당 해고임을 알 수 있었다.

살펴봐야 할 선지가 있는데,

3번 선지의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24수능 노동법 파트에서는 [1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라는 선지가 있었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정답

선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걸 평가원의 시그널로 본다면

"올해는 개념으로 변별할 건데, 기간 잘 챙겨 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차피 다 챙겨가야 하는 개념들이

데, 조금 더 신경써서 본다고 달라질 거 없다.

조금만 더 챙기자.

1번.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3권 침해를 말한다. 틀린 선지다.

2번.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틀린 선지다.

3번.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문제의 그 선지다.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 노동 위원회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10일 이내의 제한이 있다. 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5일 이내의 제한이 있다. 따로 챙겨두자. 3번은 틀린 선지다.

4번.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별개의 절차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 소송이다. 틀린 선지다.

5번.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와 □□ 고등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A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고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제시문을 보면 고등 법원은 이를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선지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6.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A국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 보세요.

갑은 A국 형법 제○○조 및 제□□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갑이 판사에게
"제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판사는 "당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소. 인생을 낭비한 죄! 게다가 남을 모욕한 죄!"라고 하였다.
갑이 태어나기 전부터 A국 형법 제○○조는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A국 형법 제△△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 (가)

—<보 기>—

ㄱ. A국 형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ㄴ. 제○○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ㄷ. 제□□조를 적용하여 갑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ㄹ. 제△△조와 비교하여 제□□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제 분석

죄형 법정주의 파트 문제인데,
제시문이 상당히 독특하다.....

[인생을 낭비]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모욕한 자와 살해한 자의 형벌이 적정하지 않다.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

ㄱ. A국 형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성문법은 성문화된 법률(문서)를 말한다. 성문화된 법률로 존재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ㄴ. 제○○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서 설명했다 싶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선지다.

ㄷ. 제□□조를 적용하여 갑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효력을 그 형벌법규의 제정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ㄹ. 제△△조와 비교하여 제□□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서 설명했다 싶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옳은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죄형 법정주의와 성문법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확률이 농후하다.

개념을 통으로 잊은 것이 아니면 이 부분을 틀릴 수가 없으므로

이 파트의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자.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의 친생자인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몇 년 뒤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법원을 나서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현재 병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①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 ②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 ③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 ④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1번.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옳은 선지다.

2번.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을의 사망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틀린 선지다.

3번.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기에 연대 책임을 질 뿐더러 이혼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갚을 의무가 있다. 틀린 선지다.

4번.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가 아닌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린 선지다.

5번.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갑과 을이 이혼했다고 판단해 1번 선지를 지웠을 것이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자.

이 파트 또한 지엽적으로 내려면 정말 생소하게도 낼 수 있다. 생소한 개념까지 빠트리지 말고 공부하자.

출제 분석

부부간의 법률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 관계 파트다.

구조도를 그려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이다.

병으로부터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500만원을 빌려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고, 이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점에서, B가 미성년자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과 갑과 을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에서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할... 뻔 했으나, 이혼 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의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 고가의 화분을 집어 던져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 갑이 을과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하였고, 갑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병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을은 항소하였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 ②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④ 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⑤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번.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 영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 아닌 법관이 발부한다. 헛갈리지 말자. 틀린 선지다.

2번.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 오직 수사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선지다.

3번.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선고유예다.

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틀린 선지다.

4번. 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 또한 유죄다. 기억하자. 틀린 선지다.

5번.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2번을 지우고 넘어가서 5번을 찍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억하자, 평가원은 항상 이렇게 함정을 낸다.

기억한 뒤에 다음에 다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따로 기억해둬야 할 것은 형사 보상 제도의 요건과 배상 명령,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서다.

형사 보상 제도의 요건은 [구금(구속) 여부]가 첫번째고, 무죄 [확정] 판결의 여부다.

배상 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배상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 재판 중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으로,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제 분석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마지막 형법 파트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단원을 문제로 냈다.

이 파트는 지엽적으로 나오기 시작한지 좀 됐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른 개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서술하겠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배상 명령과 형사 보상 제도,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생각한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 분석

매번 매년 출근하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다.

[힘의 균형] 키워드로 갑이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국제기구]와 [평화적]이라는 키워드를 보아 을이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 모두 다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며, 자유주의적 관점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자

A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웃 국가인 B국도 군비 지출을 늘려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국은 A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국제 사회에서 A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대응입니다.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A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나서서 A국의 군사력 증강이 B국에 대한 침략이 아닌 자위의 목적임을 확인하여 B국의 의심을 해소하고, A국과 B국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갑



을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보편적 선(善)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1번.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틀린 선지다.

2번.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틀린 선지다.

3번.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옳은 선지다.

4번.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보편적 선(善)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국제 관계를 보편적 선(善)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틀린 선지다.

5번.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모든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틀린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길 바라지만, 혹여나 이 문제를 틀렸다면 5번이 헛갈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에도 모두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로 챙기는 공부를 하길 바란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을국과의 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사법 기관인 A에 제소되었다. 이에 A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 군인들이 전쟁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B는 해당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B는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보 기>

- ㄱ.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 ㄴ.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ㄷ.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 ㄹ. B는 A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오직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옳지 않다.

ㄴ.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옳은 선지다.

ㄷ.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B는 안전 보장 이사회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은 총회이다. 또한 총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옳지 않다.

ㄹ. B는 A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옳은 선지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ㄴ 선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안전 보장 이사회가 판결에 불복한 국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섞여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파트는 항상 쉽게 나왔지만 이 파트의 개념이 숙지가 되어있는 사람이 적고,

그만큼 지엽적인 개념이 많은 만큼 어렵게 내기는 쉬운 파트인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20번 자리에 위치한 만큼 이후 시험에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개념을 지엽적으로 가져와 킬러의 난이도로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출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국제 사법 재판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 같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에 관한 지엽적인 개념이 조금 있으므로 설명하자면,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제 평화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인 의사 기관이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그리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또한,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을 선출한다.

즉, 임기가 1년 남은 5개국과

임기가 2년 남은 5개 국이 병존하게 된다.

이는 작년에 치뤄진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선거구 문제인 20번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Politics And Law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필수 교양

2025.06.04.
6월 모의평가 출제 분석

오르비 끄적이는 재수생 지음